

독일통일 25주년의 경제적 성과와 한계

이 해 정 · 조 호 정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독일 경제는 1990년 통일 직후 빠르게 성장했지만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유럽의 병자'로 전락하면서 통일의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경제 개혁과 지속적인 구동독 지역 개발로 통일경제의 강점이 재부각되고 국가 경쟁력도 높아져 주요 벤치마킹 국가로 재도약했다.

독일통일 25주년을 맞아 재조명 받고 있는 독일의 경제적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과는 첫째, 유럽 내 절대적인 제1위의 내수 시장으로 도약했고 경제 규모도 꾸준히 확대됐다. 둘째, 외국인 투자 유입이 늘어나고 노동 비용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었다. 셋째, 제조업 생산 기지로서 구동독 지역이 활용되면서 수출 경쟁력도 제고되었다. 넷째, 구동독 지역의 경제·생활 여건도 개선되었다. 구동독 지역(베를린 제외)의 1인당 GDP는 통일 이후 연평균 5.5%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구서독 대비 약 67% 수준으로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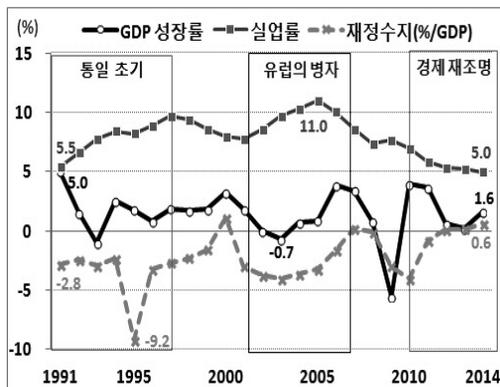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높은 재정 부담을 들 수 있다. 둘째, 구서독 지역으로 부의 집중이 심화되었다. 구서독 지역 대기업으로의 부의 집중이 심화되면서 구 동·서독 간 실업률 등 전반적인 고용 환경 격차가 이어지고 있다. 셋째, 구동독 지역의 인구 유출이 지속되었다. 구동독 지역은 양적으로는 인구 감소와 질적으로는 두뇌 유출이 지속되었다. 넷째, 독일의 사회통합도 지연되고 있다. 구동독 주민들은 여전히 통일독일의 시민이라는 심리적 소속감이 부족하다.

독일통일로 볼 때 우리도 통일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마련은 물론 통일 후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통일한국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해 확실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 특히, 통일비용 준비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 둘째, 통일한국의 경제적 편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은 통일 전부터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간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통일한국의 조기 사회통합을 위한 사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 이후, 재조명 받고 있는 독일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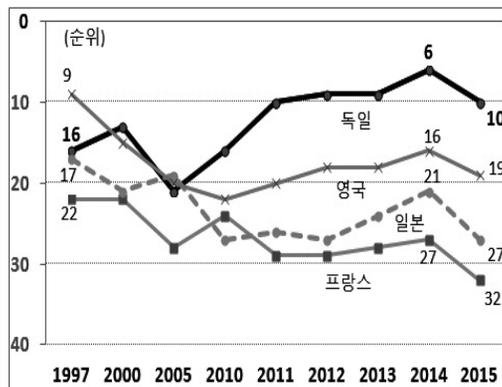
독일 경제는 통일 이후 2000년대 초반 ‘유럽의 병자’로 전락했지만 이후 개혁과 지속적 개발을 통해 통일경제의 강점을 재부각 시키고 있다. 1990년 10월 3일 하나로 통합되면서 통일 25주년을 맞은 독일은 통일 직후 빠르게 성장했지만 2000년대 초반 실업률 상승, 재정여력 약화 등으로 ‘유럽의 병자’로 전락하면서 통일의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었다. 통일 직후 구서독 마르크화의 1:1 교환과 건설 투자 확대 등으로 경제가 빠르게 성장했지만 이후 구동독 지역의 기존 산업 붕괴, 최고 11%대의 실업률 등으로 독일 경제는 2000년대 초반까지 활력을 상실하였다. 그러나 독일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경제 개혁과 구동독 지역 개발을 바탕으로 통일경제의 강점을 재부각 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도 상승하면서 주요 벤치마킹 국가로도 발돋움하였다. 독일의 국가 경쟁력은 1997년 16위에서 2014년 6위로 상승했고, 2015년은 10위를 기록하였다. G7 국가들 중 캐나다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경쟁력이 상승한 것이다. 또한, 독일은 국가신용등급도 G7 국가들 중 캐나다와 더불어 국제 3대 신용등급기관에서 모두 AAA의 최고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독일통일 25주년을 맞아 재조명 받고 있는 독일 경제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남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 북한, 베트남 경제성장률 〉



자료 : IMF(국제통화기금).

〈 북한, 베트남 1인당 GDP 〉



자료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독일통일의 경제적 성과

유럽 내 절대적인 제1위의 내수 시장이 되었고 경제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

독일은 통일 이후, 인구 통합으로 유럽 내 절대적인 1위 내수 시장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통일 이후, 독일 인구는 약 8,000만 명으로 유럽 내에서 절대적인 1위의 내수시장 규모를 달성하였다. 한편, 구 동·서독의 인구 구조는 1990년 기준 20세 이하가 구서독 20.8%, 구동독 25.2%, 20~60세는 구서독 58.4%, 구동독 56%, 60세 이상은 구서독 20.8%, 구동독 18.8%로 통일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확대됐으며, 고령화도 지연되었다. 독일의 GDP 규모도 통일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했는데, 이는 구동독 지역의 발전 등이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통일 이후, 독일의 명목 GDP는 1991년 1.5조 유로에서 2013년 2.7조 유로로 약 80% 늘어났다. 특히, 구동독 지역의 GDP 규모는 동기간 1,060억 유로에서 3,000억 유로로 늘었고 독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9%에서 11%로 확대되었다. 구동독 지역의 실질 GDP 성장률은 1992~2013년 평균 2.8%로 구서독 1.2%보다 2배 이상으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 유럽 국가 인구 상위 5개국 〉

(단위:백만명)

	독일	구서독	구동독	베를린
독일	62.7 (구서독)	79.8	82.5	80.8
	16.4 (구동독)			
프랑스	56.6	58.3	62.8	65.8
이탈리아	56.7	56.7	57.9	60.8
영국	57.2	57.3	60.2	64.4
스페인	38.8	38.9	43.3	46.5

자료 : Eurostat.

〈 독일 명목 GDP 변화 추이 〉

(단위:10억 유로)

	독일	구서독	구동독	베를린
1991	1,535	1,362 (88.8)	106 (6.9)	66 (4.3)
1995	1,849	1,559 (84.4)	206 (11.1)	83 (4.5)
2000	2,048	1,738 (84.9)	228 (11.1)	82 (4.0)
2005	2,224	1,893 (85.1)	249 (11.2)	83 (3.7)
2010	2,495	2,117 (84.9)	279 (11.2)	99 (4.0)
2013	2,738	2,328 (85.0)	300 (11.0)	109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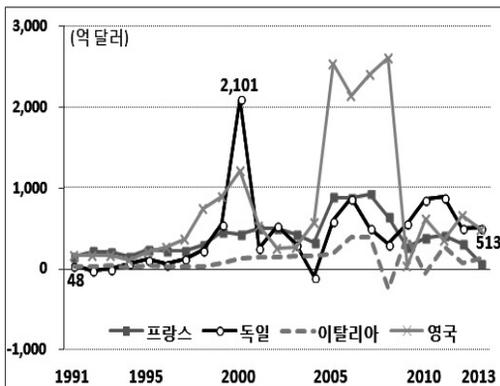
자료 : 독일 국민계정 통계.

주 : ()는 독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외국인 투자 유입이 늘어나고 노동 비용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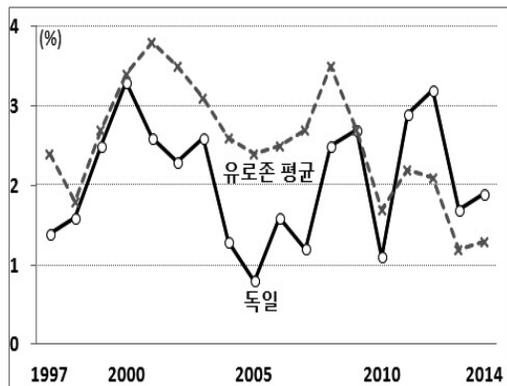
통일 이후, 정치적 리스크 축소, 확대된 내수 시장, 지정학적 위치의 강점 등이 부각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규모가 확대되었다. 독일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1991년 48억 달러에서 꾸준히 늘어나 2000년에는 2,10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외국인 직접투자 자금은 2000년 이후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유럽 재정위기 이후 독일 경제의 안정성이 재부각되면서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로존 주요국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구동독의 저임금·고학력 노동력이 대량으로 구서독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노동 비용 상승률도 2000년대 후반까지 유로존 평균보다 낮게 유지되었다. 통일 이후 구동독 주민의 구서독 이주 규모는 1991~2007년까지 순이주가 약 105만 명으로 이는 1990년도 동독 인구의 6.4%에 달한다.¹⁾ 구동독 이주자들은 젊은 연령층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좋은 학력과 경력 소유자들이 많았다. 독일의 노동 비용 상승률은 1997~2008년까지 평균 2.0%로 유로존 평균 2.9%보다 낮았다.

〈 북한, 베트남 경제성장률 〉



자료 : 세계은행.

〈 북한, 베트남 1인당 GDP 〉



자료 : 유럽통계청(Eurostat).

주 : 2009년부터는 산업 기준 NACE rev 1.1에서 2.0으로 변경됨.

1) 독일 통계청 자료 참고. HIE-RO, 『동독지역 산업 지형도』, 2014. p. 148에서 재인용.

제조업 생산 기지로서 구동독 지역이 활용되면서 수출 경쟁력도 개선

구동독은 통일 초기에는 건설업 비중이 높았지만, 이후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확대되면서 구서독과 산업구조가 유사하게 변화되었다. 구동독 지역(베를린 제외)의 산업구조는 1991년 서비스업 62.5%, 제조업 14.0% 건설업 12.1%, 농림어업 3.1%로 건설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통일 이후 구서독의 자동차, ICT, 기계 등과 관련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났고 2013년 기준 제조업 17.3%, 서비스업 68.6%로 구서독 지역과 산업 구조의 유사성이 확대되었다. 한편, 구동독 지역이 생산 기지화 되면서 수출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고 이는 독일 총수출 증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독일의 총수출은 1991년 3,404억 유로에서 2014년 1조 1,335억 유로로 약 2.3배 증가하였다. 특히, 구동독 지역의 수출도 동기간 88억 유로에서 845억 유로로 약 9배 증가했고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6%에서 7.5%로 상승하였다. 특히, 구동독 지역 기업들은 ICT, 바이오 등 최첨단 클러스터들이 조성된 만큼 이들 품목의 수출이 늘어나고 중·동유럽에 대한 교역 브릿지 역할도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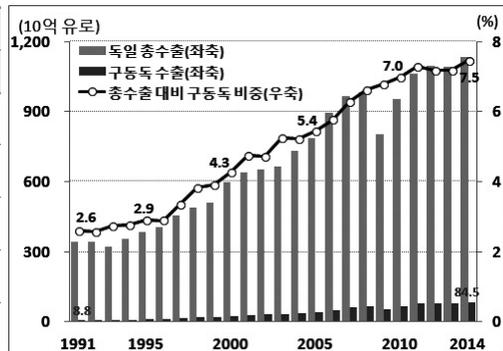
〈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추이 〉

(단위 : 억 달러)

	1991		2013	
	구서독	구동독	구서독	구동독
농림어업	1.1	3.1	0.7	1.7
광공업	37.0	34.4	30.9	29.7
제조업	28.1	14.0	23.0	17.3
건설업	5.6	12.1	4.5	7.0
서비스업	61.9	62.5	68.4	68.6

자료 : 독일 국민계정 통계를 활용하여 계산.
주 : 구서독 동독 모두 베를린 제외임.

〈 독일 총수출과 구동독 지역 수출액 및 비중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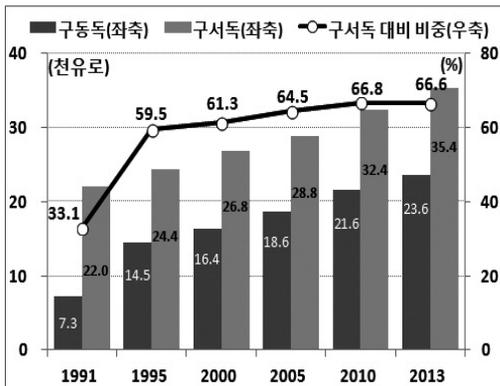


자료 : 독일 통계청.
주 : 구동독 지역 5개 주의 수출 합계이며 베를린은 제외임.

구동독 지역의 경제·생활 여건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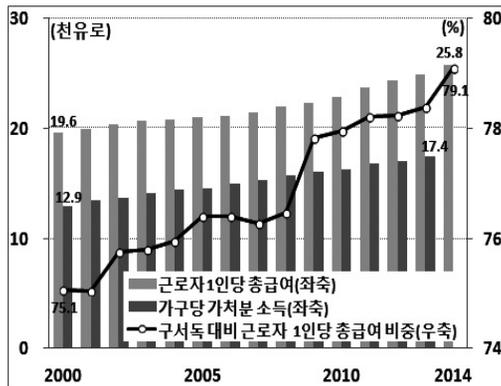
구동독 지역(베를린 제외)의 1인당 GDP는 통일 이후 연평균 5.5%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구서독 대비 약 67%로 성장하였다. 구동독의 1인당 GDP는 1991년 7,330 유로에서 2013년 2만 3,585 유로로 연평균 5.5%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한편, 구서독 지역의 1인당 GDP는 동기간 2만 2,004 유로에서 3만 5,391 유로로 연평균 2.2% 증가에 그쳤다. 구서독 대비 구동독 지역의 1인당 GDP 비중은 1991년 약 33.1%에서 2013년 66.6%로 상승하였다. 구동독 지역의 근로자 급여와 가계 소득도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면서 구서독 대비 비중도 지속 상승하였다. 구동독 지역(베를린 제외)의 근로자 1인당 총급여는 2000년 1만 9,552 유로에서 2014년 2만 5,758 유로로 연평균 2.0% 증가하였고, 구서독 대비 비중도 동기간 75.1%에서 79.1%로 4%p 상승하였다. 한편, 구동독 가계(베를린 제외)의 가처분 소득도 2000년 1만 2,931 유로에서 2013년 1만 7,439 유로로 약 32% 증가하였다. 동기간 구서독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27% 상승하였다.

〈 구서독 대비 구동독이 1인당 GDP 비중 〉



자료 : 독일 국민계정 통계.
주 : 구서독 동독 모두 베를린 제외임.

〈 구동독 지역 근로자와 가계 소득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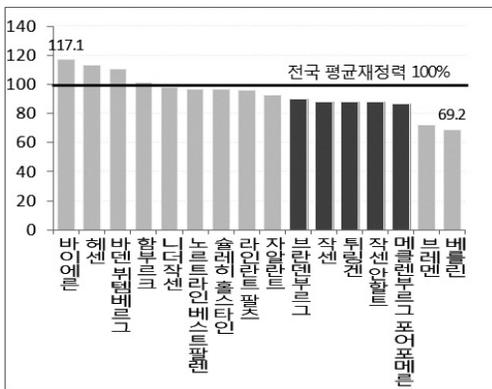
자료 : 독일 국민계정 통계를 활용하여 계산.
주 : 구서독 동독 모두 베를린 제외임.

독일통일의 한계

높은 재정 부담

통일 당시 구동독 지역 재건 비용 과소 평가로 통일비용 충당을 위한 재정 부담 증대되었다. 이로 인해, 연대기금 I('95~'04년: 1,050억 유로)·II('05~'20년: 1,050억 유로) 등 재정보전 지속되었다. 통일비용은 독일 정부의 당초 생각(독일 GDP의 1.5%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1991~2003년 연평균 GDP의 4%가 지출되었다.²⁾ 예상보다 오랜 기간 동안 대규모 통일비용을 충당하게 되면서 최근 바이에른주나 헤센주 정부 등에서 주정부 간 재정 부담이 불공평하다는 이의를 제기하게 되었다.³⁾ 2014년 기준 동·서베를린이 통합된 베를린과 브레멘을 제외하면 구동독 지역의 재정력은 여전히 구서독 지역에 비해 열악한 실정이다.

〈 독일 16개 주의 재정력 격차(2014년 기준) 〉



자료 : 독일연방 재무부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진한 부분이 구동독 지역을 의미.

〈 구동독 지역 내 대기업 〉

기업 소재지	기업
베를린 (5개)	도이체보넨(부동산) 악셀 슈프링어(미디어) 게에스베 임모빌리엔(부동산) 페에스이(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에어 베를린(항공)
예나 (2개)	예넵틱(기계) 카를 차이스 메디테크(광학)

자료 : HIE-RO, 『동독지역 산업 지형도』, 2014. p.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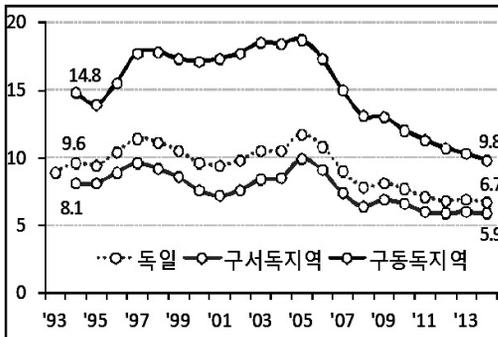
2) '91~'03년 간의 총통일비용은 1조 2,800억 유로로, 이는 통일 이전의 추정 비용인 GDP의 1.5%보다 훨씬 많은 4%에 달한 것으로 조사됨. 김창권, “독일 통일비용 15년 평가와 시사점,” 『통일경제』 2005, pp. 66~83참고.

3) 독일은 주정부 간 재정조정제도를 운영, 재정력이 강한 주의 재원으로 재정력이 약한 주에 조정교부금을 지급하도록 함. 재정 수요의 평가 기준은 주민 1인당 재정수요를 기준으로 전국 평균 재정수요지수 100%를 도출하여 적용. 재정력지수가 전국평균 100%보다 높은 경우 조정기여금 부담 증가 되며, 100%보다 낮은 경우 조정교부금 수혜 증가 됨.

구서독 지역으로의 부의 집중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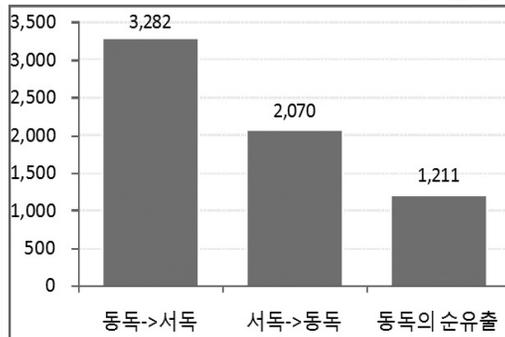
급격한 사유화와 구동독 지역의 인구 유출로 구동독 지역 대기업 해체 및 서독 지역 이전이 가속화되었다. 구동독 지역 내 대기업 수는 1988년 145개에서 2012년 현재 7개로 축소되었다. 한편, 통일 초기 신속한 구조조정으로 구동독 지역 내 대량 실업 발생하게 되었다. 통일 이후 구서독 지역의 실업률이 6~9%대에 머무른 반면, 구동독 지역의 실업률은 10~18%의 높은 수준을 보여 지역 간 실업률 격차가 해소 되지 못했다. 이는 구동독 주민들의 대규모 구서독 이주 현상에 대한 우려와 총선 등 정치적 이유로 동서독 간 상호환율(4.4 : 1)을 무시하고 1 : 1 화폐 통합을 결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로 인한 통일 초기 구동독 상품의 판매·수출 부진과 가격 경쟁력 상실이 대규모 기업 도산으로 귀결되었다. 또한, 신탁청이 사유화 실적에 치중하여 기업가치에 대한 세밀한 평가 없이 구매자 선정을 남발하여 대량 실직 및 기업 도산을 속출시킨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 통일 이후 구동·서독 지역의 실업률 추이 〉
(%)



자료 : 독일 통계청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정리.
주 : 구서독 동독 모두 베를린 제외임.

〈 국내 이동으로 인한 구동독 지역의 인구 유출(1991~2013년 간) 〉
(천 명)



자료 : 독일 통계청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정리.
주 : 구서독 동독 모두 베를린 제외임.

구동독 지역의 인구 유출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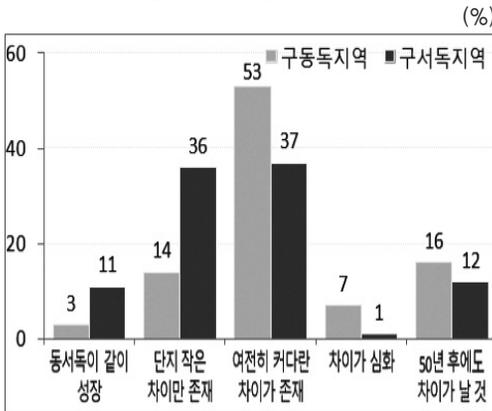
구동독 지역의 양적인 인구 감소와 질적인 두뇌 유출로 구동·서독 간 격차 지속되었다.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구동독 인구의 대거 이탈로 구동독 지역 경제력이 저하되고, 이는 다시 구동독 지역 성장 둔화와 인구 이동 촉진이라는 악순환 구조를

창출하였다. 통일 이후 '91~'13년까지 구동독 인구는 1,460만 명에서 1,270만 명으로 감소되었으며, 구서독 지역으로 순이주 규모는 약 121만 명에 달했다.

독일의 사회통합 지연

구동독 지역 주민들의 통일독일 시민이라는 심리적 소속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구동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구동독 지역 주민들 가운데 자신을 실질적인 독일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은 25%에 불과(베를린-브란덴부르크 사회과학연구센터 조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⁴⁾ 동독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지만 통일독일에서 행복하다고 느끼지도 않는다고 답한 주민들이 59%에 달했으며, 9%는 동독시절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반응하였다. 이는 구 동·서독 지역간 주민 생활수준 불균형 등으로 구동독 지역 주민들이 2등 국민이라는 상실감과 패배감을 경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독일에서는 '오스탈기(Ostalgie)'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는 동독을 의미하는 오스트(Ost)와 향수를 의미하는 노스탈기(Nostalgie)가 결합된 말로 구동독 시절에 대한 향수를 의미한다.

〈 독일통일 현황 평가(2010년) 〉



자료 :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사회과학연구센터, 통일부(2014)에서 재인용.

〈 구 동·서독 주민들의 정체성 형성(2010년) 〉

구분	구동독 지역 (%)	구서독 지역 (%)
정식 통일 독일 시민이라고 느낀다	25	장벽이 다시 세워지면 좋겠다 11
다시 동독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9	통일독일에서 행복하지 않다 10
동독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지만 통일독일에서 행복하다고 느끼지도 않는다	59	통일 전과 후가 다르지 않다 44
		통일 이후 더 행복하다 20
		통일 이후 비로소 독일인으로 느낀다 6
무응답	7	무응답 9
합계	100	합계 100

자료 :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사회과학연구센터, 통일부(2014)에서 재인용.

4)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사회과학연구센터는 1990년부터 동서독 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2001년까지는 대면 면접조사로, 2002년부터는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10,000명 이상의 구동독 지역 주민들에게 설문지를 배포, 회수율을 9~13%), 통일 이후 현재 까지 구동독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유일한 여론조사임. 통일부, 『독일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 의식변화 분석: 1990~2010』, 2014, p. 25.

시사점

독일통일로 볼 때 우리도 통일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마련은 물론 통일 후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통일한국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해 확실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 특히, 통일비용 준비에 대한 계획 수립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구동독 지역에 대한 경제 재건 및 인프라 투자를 위해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총 3,432억 유로(약 450조원)가 지원되고 있다. 구동독 지역의 투자 재원은 독일통일자금('90~'94) 822억 유로, 연대기금 I('90~'04) 1,050억 유로, 연대기금 II('05~'19) 1,050억 유로, 특별기금('05~'19) 510억 유로 등 총 3,432억 유로가 지원되고 있다. 둘째, 통일한국의 경제적 편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은 통일 전부터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간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통일 전 남북경협의 단계적·전략적 접근 등을 통해 북한의 인적·지하 자원과 한국의 자본·기술력이 결합하여 통일과정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남북중·남북러 등 다자간 경제 협력 확대를 통해 통일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통일한국의 조기 사회 통합을 위한 사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민간 교류를 통한 '작은 통일'에서 국가 차원의 '큰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적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물론, 환경·문화 부문의 협력을 점차 확대해 남북한 주민들 간 심리적 괴리감 축소 노력이 필요하다. 統